

# 자연과의 전쟁을 멈출때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 각 30%를 보호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유엔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15차 생물종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의 최종 합의의 가장 핵심이다. 정식 명칭은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종다양성 프레임워크(GBF)'라는 좀 긴 이름이다. 196개국 이 참여했고, 3년 이상 지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COP15의 개최지가 중국의 쿤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로 옮겨져 개최되었다. 합의 내용에는 파괴 훼손된 지구 생태계의 30%를 복원하자는 합의도 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자연과의 평화 협정'이라고 반겼고, 세계 유수한 언론도 '기념비적 합의'라고 전했다.

30%의 육지와 70% 바다로 되어있는 동근 지구를 상상해 보자. 지구와 80억 인류의 미래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구의 30%를 보호지역 지정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곳에서 광산을 비롯, 각종 자원개발과 도로며 뱃세, 도시와 산업개발이 허용할 수 없다, 30%는 '손대지 않는 땅과 바다'이다. 약속은 이뤄졌고 이제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최소한 육상과 바다의 각 30%를 2030년까지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립

공원이나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습지보존지역 혹은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등과 같은 형태로 말이다.

그동안 지구환경 생태계의 파괴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만큼 심각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100만 종의 생물의 멸종 우려, 아마존 열림우림의 파괴, 산호초의 파괴, 해양 플라스틱 오염 등 위기는 확대재생산을 거듭해 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도 자연생태계파괴, 야생동물의 서식처 손실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동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류가 자연과의 전쟁 중'이며, '인류가 대량멸종의 무기'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환경생태계 위기는 '자연의 보복'으로 규정하며 무모하고 자멸적인 전쟁을 멈출 것을 주장했다. 이번 '지구의 30% 보호' 합의는 특단의 대응책이다.

세계 자연보존연맹의 자료(2020년)에 의하면, 세계 육지의 15%, 해양의 7% 내외가 보존지역이라 한다. 한국은 육지가 17%, 해양이 3-4% 정도이다. 이제 모든 국가는 몬트리올에서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주인이 없는 공해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30%를 선정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국립공원을 확대해 가는 것이 보호지역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정부에 의해 용인되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내 22개 국립공원으로 개발행위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우려도 있고, 산악열차를 비롯한 또 다양한 개발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연 국립공원에서 과거와 다른 이 같은 개발행

위가 타당인지 따져봐야 한다.

국립공원 제도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탄생했다. 이른바 미국 서부에 엘로우스톤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이때 지정되었다. 19세기 말 골드러시와 개발 광풍이 휘몰아치던 때였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오늘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와 같은 개발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사람이 손대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항구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철칙이다. 국립공원은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만든 최고의 아이디어로 칭송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국립공원 또한 국토 환경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다. 법적으로도 삼질이나 포크레인이 허용될 수 없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같은 인공시설은 대부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주민 소득증대와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그 지역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 과연 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생태계와 생물 종다양성이 파괴 훼손되어도 될 것인가. 세계는 자연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데, 세계 11위 경제대국에서 '자연과의 전쟁'에 나서자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구테흐스 사무총장 말대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책임한 행위다.' 지리산 무등산 설악산 등 우리의 국립공원이 요세미티와 엘로우스톤처럼 영원히 지켜지기를 소망해 본다.

## 社說

# 자산 IC 진출로 77억 날릴판 책임 규명을

## 용역결과 "부적정 장소 개설"

완공 후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지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진출로가 진출 실패율과 사고 위험이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 용역 결과 드러났다. 또한 대체 방안으로 거론됐던 우측 진출로 역시 사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지산IC는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80억원대의 예산 낭비를 둘러싼 책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1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자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상현실(VR) 주행실험 결과, 비교 분석된 지산IC의 네가지 대안 진출로의 진출 실패율이 일반적 진출로 대비 2.4~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측 진출로의 진출실패율이 35%로 좌측진출로의 실패율 40%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결국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출로 개설 지점이 잘못 선택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우측 방향으로 계획했으나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와 분진, 사생할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좌측방향 진출로로 최종 결정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지산IC 진출로가 위험한 부적정한 곳에 개설됐다는 의미다. 강 시장은 "자산IC에 대해선 폐쇄돼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만약 폐쇄한다면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브릿지를 만들건지, 의회 감사 요구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차분히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결과는 완공된 지산IC 진출로 개통 불가를 의미하지만 77억원의 사업비(설계비 6억 여원 포함)를 낭비한 점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가 자체 특별감사를 벌이든지 아니면 시정을 감시하는 광주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든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를 포함해 지산 IC 건설 배경에서부터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훑아보아야 할 것이다.

# 위기의 지역경제, 시스템 변화로 넘어야

## 수출부터 소비까지 총체 난국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한다. 지역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이 부진을 겪고, 건설산업은 역대 최악의 업황 속에서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에 생산 비용 상승까지 겹친 농축수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호남지방방통계청 등 지역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최신 자료를 종합하면 지역 경제 위기의 심각성은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들어 1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한 46억 13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지난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건설수주액도 16조 1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수주액은 5071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4.9%나 줄어들며 역대 최고 감소율을 보였다. 농축수산업 역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예년 대비 출하액이 큰 폭으로 줄었고, 판매도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역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내 자산 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했다. 미국 스타트업과 IT기업이 주 고객인 SVB는 지난 40년간 실리콘밸리의 산파 역할을 해온 혁신금융의 상징이다. SVB의 파산으로 앞으로 있을 Fed의 금리 운용 향방도 한층 복잡해 졌다. 지역경제 지표의 하락과 함께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 충격까지 더해진 올해 지역 경제로서는 최악의 위기인 셈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제조, 건설 등 산업이 스스로 신성장동력을 접목하는 과감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기업의 변화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위기를 넘기 위한 지역민의 동참도 필요하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제주도 도두동 인근 거리에 활짝 핀 벚꽃나무로 참새가 날아와 꿀을 따고 있다. 제주=뉴시스

## 서석대

'유치원'이란 단어는 일제 잔재 가운데 하나다. 이 명칭이 사용된 건 지난 1897년이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부산유치원'이 유래다.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을 '킨더가르텐'이라고 부른다. 독일어로 '어린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이다. 이를 일본식 한자(요치엔)로 바꾼 것이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논의 중인데, 이번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는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친일 잔재가 남아 있다. 주로 언어로 구조화 된 면이 강한 것 같다. 일제 강점기 35년을 거치면서, 무의식적으로 스며들다 보니 지금까지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짬뽕(초마면), 우동(가락국수), 망년회(송년회), 가라(가짜), 기스(흙집), 사라(접시), 익일(다음 날), 가불(선지급), 유도리(용통성), 만땅(가득) 등 셀수 없을 정도다.

학교 현장에는 일제의 군국주의 문화가 남아있다. 반장, 부반장은 일제강점기 때의 급장의 호칭이다. 그 시절, 담임교사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반장으로 지명해 자신의 대리자로 활용했다. 위계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는 일본



군국주의 문화의 소산이었다. 차렷이나 경례 등의 행위도 같은 맥락이다.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인 일제의 잔재는 씻기지 않고 있고, 일본은 과거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6일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발표한 뒤, 국내의 거센 반발을 안고 이뤄진 회담이어서 어느때 보다 일본의 태도가 주목된다.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강제동원을 포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가해자의 몫이다. 이번 회담은 이를 정상회담문에 담아내느냐 여부가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다. '제3자 변제'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현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본다면, 이제 공은 온전히 일본에게 돌아갔다.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 미래로만 가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가깝고도 먼나라로 남을지, 협력적 동반자의 길을 열지는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